'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의 논의의 장'

제14차 통일한국포럼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한반도 정세 어디로?"

▌일시 : 2017. 11. 15(수) 14:00~17:00　　▌장소 : 밝은사회국제클럽(서울 율곡로)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제6차 핵실험, 괌 포위사격 위협 등으로 연쇄도발에 나서자 미국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훈련과 유사시 군사적 옵션의사 표명으로 맞대응하며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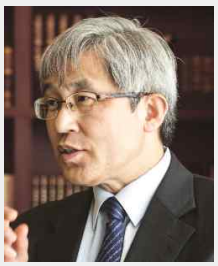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14일 한·중·일을 포함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강 대 강'의 북·미 간 대치와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 간 신경전 속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지금의 한반도 위기국면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4차 통일한국포럼에서는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순방결과와 미국 한반도 정책의 전략적 셈법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과 대북정책 기조 및 전략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깊은 통찰과 포럼 회원들의 지혜로운 의견이 어우러져 현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할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1. **등　록** (13:30~14:00)
2. **개회식** (14:00~14:30)
   개회사　**손 재 식** (통일한국포럼 회장)
3. **본회의** (14:30~16:50)　**"트럼프 아시아 순방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좌장　**이 관 세** (前 통일부 차관)
   주 제 발 표　**"트럼프 순방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라운드테이블　**"기로에 선 한국외교,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 동 률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왕 선 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 관 세
전 통일부 차관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 동 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왕 선 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주관기관 : 평화문제연구소(IPA)　　■ 협력기관 : 독일 한스자이델재단(HSS)

❖ 목 차 ❖

■ 주제발표

"트럼프 아시아 순방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6

■ 라운드테이블

"기로에 선 한국외교,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15

· 토론1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6
· 토론2 이 동 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21
· 토론3 왕 선 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26
· 토론4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30

주제발표

“트럼프 아시아 순방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주제발표

“트럼프 순방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 한미정상회담 평가

□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힘을 통한 평화, 억제

o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과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 시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과 국회연설 등에서 돌출발언을 하지 않는 등 한미갈등을 노출하지 않음
- 대북정책 관련 한미는 ‘긴밀한 협조와 조율, 협력 지속’을 약속하며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에 합의
- 한미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한국이 북핵해법과 관련하여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으로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갈등을 노출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갈망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정제된 미국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군사력을 동원한 북핵 저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억제)’로

o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군사력을 동원한 북핵 저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억제)’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
-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이제는 힘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평화를

원한다면 강력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높여 오다가, 한국정부의 전쟁불가 의지를 반영해서 '힘을 통한 평화, 억제'로 방향을 잡고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하면서 첨단무기 판매를 통한 실리 추구
- 한국은 전쟁가능성을 줄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미국산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통한 힘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데 주력

2.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균형외교

□ 트럼프의 지정학: 인도·태평양 전략

o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일본, 한국과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을 강조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인도·태평양 전략'[1] 구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구상
-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국, ASEAN 등으로 확장하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맞대응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 내세웠던 '아시아중시정책(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정책(rebalancing)'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이란 용어 대신에 '인도·태평양지역'[2]이란 용어를 사용

---

1)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인도·태평양(Indo-Pacific)전략'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란 개념 대신 인도까지 포함해 해양 세력이 중국을 에워싸는 행태로 중국의 세력확대를 견제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인도 측에서 일본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2007년 처음 쓴 용어다. 중국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한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10일.

2) 미국 백악관이 10월 16일 트럼프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는 점을 주목

o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란 점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o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인도 태평양지역 구상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일본이 인도·퍼시픽(태평양)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1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일 뿐 우리는 동의한 것 아니다"고 밝힘
-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미국이 제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다변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절한 개념인지에 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

o 인도·태평양지역 개념과 전략은 대중국전략 차원에서 범태평양세력권 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의 태평양지역으로의 세력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19차 당대회에서 '신형국제관계'를 주창하는 등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세력 확산을 추진하자,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지역 개념을 들고 나와 인도, 호주, 일본, 한국, ASEAN을 연결하여 대중국 봉쇄를 위한 세력권 형성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미·중의 세력경쟁과 한국의 '균형외교'

o 최근 한·중이 사드문제로 불거졌던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으로 부름으로써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미국과 중국 모두 재인식하고 있음

- 한국정부의 '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표명으로 한·중 사드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복원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의 태도변화로 볼 수 있음
-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정부와 갈등을 지속할 경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갈등이 겹쳐질 경우 '신냉전질서'로 재편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탈냉전 이후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군사안보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
-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을 어렵게 할 경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o 한중관계 복원을 계기로 '균형외교'가 다시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3]한 바와 같이 균형외교는 미·중 사이의 균형이 아니라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이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제로섬관계로 볼 필요는 없음
- 미국과의 군사동맹, 중국과의 교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어느 한 국가에 편향된 외교를 할 수 없음

□ '코리아 패싱', 한국 '건너뛰기(skipping)'는 없다

o 어법에도 맞지 않는 '코리아 패싱'이란 말은 자기비하적인 말로써 한국 국력

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ASEAN), 러시아, EU(유럽연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더욱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에 걸맞은 위상과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변국들이 한국을 '건너뛰어(skipping)' 한반도문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면서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며 '코리아 패싱' 우려를 일축한 것처럼 주변국들이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2.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예상 반응

□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기간 재확인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o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확인한 북핵해법은 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고(일본방문 11월 6일), 힘을 통한 평화, 억제 시대 개막(이제는 힘의 시대다, 국회연설, 11월 8일), ②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1월 8일), 완전하고 영원한 북한의 비핵화(미중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11월 9일) 등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새로운 북핵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하는데 공감대를 이룸
-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9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와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약속을 논의했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으로써 핵무기 고도화와 관련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

□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면서 '관여'(대화) 가능성 모색

o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사용을 통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곧바로 추진하지 않고 '힘에 의한 평화(억제)'를 강조함으로써 당분간 북미갈등은 숨고르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북한을 ‘교도국가(감옥국가)’, ‘악당체제’,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지옥’으로 묘사했지만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중단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체인 비핵화다”라고 밝혀 ‘관여(대화)의 문’도 열려있음을 확인함
-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좋다”고 말했고,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북한의 숨고르기 지속 가능성

o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인 11월 6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11월 8일 국회연설에서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과 ‘시험하지도 말 것’을 경고하면서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둬 북한도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지켜보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후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o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조치 검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낮추고 ‘힘을 통한 평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도 당분간 숨고르기를 지속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음

3. 북한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

□ 북핵 완성 저지를 위한 노력

o 북한이 핵무력완성을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지금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름

-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게 되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군사적 옵션의 사용 또는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지도 모름
- 2017년 10월 12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현재는 북핵위협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를 기대해보자"고 말했음

o 북한의 핵무력 완성도가 95% 정도라면 남은 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완성을 늦추거나 동결을 모색해야 할 것

-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 실거리로 ICBM 시험발사를 추진하거나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응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o 전쟁을 피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연이은 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2, 화성-14)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국과 중국이 제안한 북핵해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동결 입구론'과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거부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해 제 갈 길을 가고 있어 강화된 제재(최대의 압박) 이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도 사실임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군사연습 잠정 중단이나 조정 등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관련한 조치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중단 합의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

o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군사분계선에서의 초보적 수준의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이산가족상봉을 의한 적십자회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회담 등을 다시 제의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일체의 남북접촉을 거부하고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공조 강화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꾸준히 신뢰를 쌓고 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남북관계 복원이란 관점에서 고위급회담 또는 특사교환문제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임

라운드테이블

“기로에 선 한국외교,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토 론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 동 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왕 선 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토론문1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위기 국면 지속과 북핵 해결 동력 부족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금은 강력한 힘에 입각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최고의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이고,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한·미가 적극 공조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양국의 입장이 공조를 이룬 것은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핵 실전능력과 장거리미사일 보유 및 배치가 임박한 것을 감안하면 최고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11월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대북 원유 제공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거래 단절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11월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사드 문제에 마침표를 찍고 정상 차원에서 관계복원을 공식화하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양 정상은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7월 6일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북·미가 물밑에서 메시지만 교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그간 북한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안이라고 여겨지는 중국의 '쌍 중단, 쌍궤 병행' 제안도 거절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동북아 순방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핵 실전능력과 장거리미사일 보유가 머지않았으므로 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동력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평가된다.

2. 북핵 억지방안

1) 한·미 핵 안보 조약 체결과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복을 위한 절대무기는커녕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의 힘을 믿고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만일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보장을 회피하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신뢰할만한 보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한적인 효용만 가질 뿐이고 중·러와의 관계를 저해하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북한 핵 미사일을 억지하는 데는 매우 불충분할 뿐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뀐 것이다.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억지하는 정책이 먼저 추진되었어야 한다. 방어가 아닌 응징 및 보복능력에 입각한 억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확실한 억지책을 마련하여 대북 안보에 자신감을 회복한 뒤, 북핵을 적어도 동결시키거나 해결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남북 경협을 진흥시켜 '대박'이 되는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핵 개발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미동맹 조약을 핵 안보 보장조약으로 보강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이 있어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보장되는 한계를 가진 한미동맹 조약을 적어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자동적이고 즉응적인 핵 보복이 실시되도록 양국간 조약으로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일거에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을 조건부로 재배치하여 미국의 자동

적인 핵 억지 체제 가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중·러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정 시점을 정해 북핵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한 뒤 성과가 없으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 뒤 또 다시 협상을 진행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와 함께 전술핵도 철수시킬 것임을 다짐한다면 중·러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하였지만 아직 상당한 허점을 남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면 핵미사일로 무장한 핵 잠수함의 한국 항구 상시 순환 배치 등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의 독자적인 대량보복 및 정밀타격능력 확보

우리 군 독자적으로도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가능한 최고수준의 보복 및 방어능력을 합목적적이고 균형적으로 구비해 가야 할 것이다.

보복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사거리를 개선하고 공군력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량보복능력을 갖추며, 감시·정찰 장비를 현대화하고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특공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해 독자적으로도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김정은 일가에 대한 신병을 부단히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 일가를 비롯하여 대량보복 및 정밀타격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어능력에 대해서는 킬체인과 사드, KAMD는 지상 위주 방어시스템으로 SLBM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매우 제한적임을 감안해야 한다. 사드처럼 지상기반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는 고정된 레이더로 전방 좌우 120도 외곽 탐지는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공학적인 영향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배치될 수밖에 없어 저고도해상 공격에 대해서는 초기 탐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형 MD 구축과 45km까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PAC-3,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3을 장착한 이지스함 배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대잠 방어체계 간의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SLBM 조기 탐지를 위한 미국 및 일본 등과의 우주 기반 다중센서 공유, 그리고 북한의 SLBM발사 잠수함을

상시로 감시하고 제압·억지할 수 있는 핵잠수함 건조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증진된 능력을 기반으로 조속히 전작권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3. 북핵 해결방안

그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의 입장에 수세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이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핵 억지력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능동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불사한다고 하면서 위기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켰다. 더구나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따라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상태이다. 미국은 물밑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남북 대화를 좌절시키는데 일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 결과를 보면, 미국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강화와 경제적 이익 취득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물론 미국이 이제 한·중·일 3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정부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위기 소강상태를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포괄적이고 창의적이며 실행가능한 구상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12월 문대통령의 방중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 북한에게 제안해야 한다.

즉 정부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북핵 해결방안과 Plan B를 마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고 나오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도 설득해 결국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조건없는 협상도 적극적으로 동시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창의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북한을 끌어들이려면 '선행동' 요구보다는 '동시행동'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안보 논리를 채택해야 하며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시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구성국 모두를 태우고 우리가 한반도호를 운전해 평화구축과 통일을 향해 운행하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미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상호안보에 입각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창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모범적으로 운전해야 한다.

#토론문2

이 동 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1. 시진핑 2기 외교전략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 집권세력 내부에는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와 강화라는 공동의 절대 목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진핑 중심의 권력 강화가 진행된 것이다. 즉 '신시대' 라는 국면에서 권력의 집중화를 통한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통합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공산당 체제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시진핑 2기는 강력한 권력 기반을 확립하고 장미빛 비전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출범한 듯 보이지만 실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시진핑 2기가 제시하고 있는 강국화 플랜을 실질적으로 진행시켜가고자 한다면 향후 국내 발전과 안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실제로 19차 당 대회보고에서는 18차 대회에서 역점을 두고 강조했던 '해양강국' 담론이 사라지고 대신 '일대일로'를 한층 강조하는 변화가 있다. '해양강국' 구상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각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발전전략으로서의 해양 진출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따라서 해양강국 구상과 전략이 야기한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딜레마를 완화하면서 해양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일대일로'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의 해양 진출이 '이익공동체' 라는 공공재를 창출할 것임을 설득하는 지경제학적 접근을 선택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도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도 누차에 걸쳐 언급했듯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할 정도로 강국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고립주의적 경향이 지속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강국화 플랜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간주하면서 부상 일정을 진전시켜 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지혜와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은 당대회 직후 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류사회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공헌을 강조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통해 개도국의 현대화에 새로운 경로(path)를 제공하고,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방안(solution)을 제시하고 더 좋은 사회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어 중국의 지혜(wisdom)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은 전통대국과는 다른 강국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요컨대 중국은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미국과 차별적인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장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2. 미중 정상회담에 투영된 중국의 대외전략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19차 당대회에서 기존 관행들을 파격하면서까지 권력 강화를 전개했던 만큼 직후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첫 다자외교무대인 APEC 회의는 국내외에 신시대를 이끌어 갈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야 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즉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하고 주목받아야 하는 회담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실제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양국 정상이 협력만이 유일한 선택이며 윈-윈(共贏)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이라는 데 공동 인식을 했다"며 "미중 관계의 새 청사진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뇌관을 건드리지 않는데 집중하였다. 즉 예상된 뇌관

인 북핵문제, 무역불균형 등이 정상회담 의제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정확인 읽고 적절한 통 큰 2535억 달러 경협 선물 보따리를 을 제시하여 일단 성공적인 회담을 마무리지었다.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혔고,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전면 이행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형상 중국은 대북제재 유지와 강화에 합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미국이 기대하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은행계좌 폐쇄 등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한 논의를 피해갔으며 오히려 제재의 목적이 대화여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APEC 정상회의는 국제 다자무대인 만큼 시진핑 2기 로서 미국과 차별화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TPP 탈퇴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이전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에 전략적으로 편승해왔던 아세안 국가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APEC 정상회담을 아세안 국가들은 견인하면서 중국의 리더십을 확장해갈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자유무역과 경제세계화를 역설하면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일대일로'가 국제사회의 공공재가 될 것임을 강조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견인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을 우회하면서 지경제학적 부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시도를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으로 전환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중간 지정학 경쟁이 부활하고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 부터의 복합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비전은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민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과도하게 고양시킴으로써 중국 외교가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이 해양 영유권 분쟁과 같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이슈에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이유이다.

만일 시진핑 정부가 부상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인접국들과 주권, 영토 등 핵심이익과 관련된 분쟁이 재차 발생할 경우 중국인민들의 고양된 기대와 국제사회의 경계를 여하히 조율해 가는냐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에도 사안과 이슈에 따라 상이한 복잡한 대외 행동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으로 권력집중은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교의 유연성이 제약되고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 한중관계의 함의와 대중국 외교

향후 한중관계의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2013년 박근혜, 시진핑 두 지도자의 특별한 관계에 의존한 양국관계의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으로의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향후에도 한중관계는 정상회담이 주도하는 패턴을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정상간 관계를 국가관계, 그리고 국민관계로 확장하여 제도화하는 노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중국이 주변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중국의 강국화 일정을 진행시켜 갈 것이고 그 결과 미중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경쟁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회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가 중요하다. 미중의 경쟁 소용돌이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북핵과 통일문제에 대한 과도한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는 이미 양자차원을 넘어서 미중 관계 등 국제구조에 취약한 관계로 전이되었다. 한중관계는 양자차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 등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미중관계는 중국 부상의 새로운 접근, 트럼프 정부의 높은 불확실성과 불가측성 등으로 인해 유동적이며,

특히 미국의 동맹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더욱 불명확하므로 그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해졌다.

미국과 중국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청중은 미국이고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청중은 중국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향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도 메시지 발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이 비핵화라는 원론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해법에서 접점을 찾는 못하는 이유는 미래 한반도 지형에 대한 전략적 불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화가 초미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장기적 전략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보의 진전도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전략지형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한미중 삼국간 논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이번 계기에 한미중 대화채널의 중요성을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야 한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미중 삼국이 북핵 해결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열어 놓고 논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한미중 대화에서 출발하여 한중러, 한중일, 그리고 미중 남북한 등 다양한 소다자 대화로 확장해 간다면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냉전의 귀환'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토론문3

왕 선 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외교 전략은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외교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 전략을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과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은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고, 이어서 베이징과 베트남, 필리핀에서 전개된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미러 정상회담도 외교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대 일정으로 볼 수 있다. 중대한 외교 일정이 1주일 정도 기간 내에 잇따라 벌어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 만큼 우리 외교 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외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 전략을 제대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잡하게 전개된 정상회담 결과나 각국 평가 등 상황 변화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만 할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외교 상황 변화를 알아보려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만 열흘 동안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미러 정상회담을 소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시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최대 압박과 과제'다. 특히 북핵 문제는 중국이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과 협력하는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과 북, 또는 미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몇 동안 제19차 공산당 대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중요

한 외교 과제를 보류한 경향이 있다. 북핵 문제도 보류됐던 과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역동성은 베이징에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를 계기로 국내 정치적 권력을 확장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류했던 정책 현안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북핵 문제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기존에 보여준 대북 정책 해결 방안, 즉 쌍중단과 쌍궤병행 방안을 한층 격상해서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앞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던 한미 동맹 관계,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선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밀어버린 사드 문제 대응에서 일정 부분 개선 추세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한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여주겠지만, 국제 사회 대북 제재가 한층 더 강화한 만큼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연말연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핵보유국 선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인 확신을 갖기 전에 몇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주요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 또는 국면 전환을 유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라진 한반도 주변 외교 환경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인식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수준과 내용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중대한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압박과 관여를 주장하면서 외부적으로 압박을 강조하고,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을 유인하는 노력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앞세우는 전략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변수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 국무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만큼의 중요 변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심을 보일 경우 한반도 환경은 일거에 변화할 수 있다.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한국이나 미국, 중국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행보를 고려한다면,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거의 완성됐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 협상을 압박하거나 정반대로 중국이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경우 궁극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참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 이외에 다음 단계 중요한 변수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통합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중국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과 중국의 기존 긴장 관계는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변수 요인이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과 독자적인 소통 채널 상황에 따라 변수의 크기는 달라진다. 북한, 미국, 중국과 모두 활발하게 소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도 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통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면 미미한 변수에 불과하게 된다.

한편 내년 2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 정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일부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은 커졌다. 그러나 그것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정세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측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는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스포츠가 정치 구도를 변경시키는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개연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겠지만, 북한의 행보를 본다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과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은 또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이 가야할 방향과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 개선 등의 외교 과제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경돼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장기 전략을 수립하려면 초당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정권 교체 이후 일방적인 정책 폐기의 명분이 된다. 이것은 대북 정책 실패의 악순환을 형성하는 이유가 되므로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셋째,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전략은 고도의 합리성과 통합성,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단순하고 즉각적인 대응 중심의 외교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얼룩말처럼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토론문4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1. 북한의 북핵문제 접근전략

□ 주요 발언을 통해 본 북한의 핵문제 접근 가이드라인(원칙)

①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 접근방식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o 북한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중성과 공격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보유
- 2001 대화재개, 2002 NPR 핵 선제공격 대상, 테러지원국 지정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군사공격

o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체제 안전보장을 얻기 위해서는 핵보유를 통한 '전략적 지위' 확보 밖에 없다고 보고 있음

o 북한은 모든 한반도 관련 사안의 해결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4] 철회를 주장

o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전환과 관련된 신뢰할만한 신호(signal)나 상징적 조치가 긍정적으로 전달될 때 가능

4)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은 작게는 '도발적 망발'부터 핵정책에 북한을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분,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공격훈련, 전략자산의 전개, 정밀타격·예방공격·참수작전 등 대체로 군사적 적대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말함.

② 북한은 평화협정을 북미간 신뢰의 결과가 아닌 '조건'으로 본다.

o 북한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핵동결이나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o 북·미 사이의 '신뢰'는 곧 '평화협정'을 의미
- "신뢰가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5)]

③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분리하는 접근(평화협정-비핵화 연계에서 분리로)

o 북한은 2010년까지는 표면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행하는 합리적 방도'라고 주장
-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비핵화'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
- 즉, 평화협정 체결의 반대급부로 '비핵화' 용의를 명확히 밝힘

o 2013년부터 북한은 평화협정의 반대급부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
-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태도

o 2013년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 핵·경제 병진노선 천명, 핵보유국 지위 법령 제정
- '핵강국' 용어 등장

④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대화 및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o 핵무기가 "대화마당과 협상탁우에 올려놓고 론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6)]

o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및 위성발사국의 지위를 영구화할 것을 선언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영원히 끝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만 남아

5) 외무성 대변인 담화(2010. 10. 18)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2017. 3. 31)

있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방향 전환'

o 김정은 정권은 ‘북핵=체제(정권)’로 둘을 동일시, 북핵문제 접근도 ‘9.19 체제’의 방식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
  - 김정일이 ‘핵개발=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 핵개발을 협상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과는 차이
  - ‘북핵=체제(정권)’의 도식을 대체할 ‘체제 안전보장’의 강력한 장치나 제안이 신뢰성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북한의 전략을 변경시키기는 것은 불가능

⑤ 북한은 한국을 핵문제의 대화 및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o 한국은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합리적 중재자나 개입자도 아니라고 주장

o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미 사이의 문제
  - 과거 북·미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 남·북·미 잠정협정을 제안(1996)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경유하는 방식의 한국의 개입을 용인(2000)하거나, 6자회담에 한국 참여를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미국의 의지 부족과 태도 변화로 모두 실패했다고 봄

o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포함·경유하는 대화 구도는 핵보유국 및 전략적 지위 인정, 실질적인 체제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북·미 담판 구도의 의제 집중력을 흐리면서 초점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음

o 한국을 당사자로 한 대화나 협상이 미국의 협상 의지를 약화시키고 기만적인 이중 행동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

o ICBM 및 IRBM의 능력 신장은 다자 구도의 대화나 한국의 개입 필요성 감소시킴

□ **주요 발언을 통해 본 북한의 요구조건**

o 북한은 2013년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사와 비핵화 용의가 없음을 선언한 이후, 핵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어 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는 않았음

- 다만 핵·미사일, 평화협정, (북·미/남북)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대화 및 협상, 해결의 조건을 외무성 성명, 공식매체 사설, 외무성 관료들의 입을 통해 언급해 왔음

핵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북한의 요구조건

조건 명목		요구 내용
핵(미사일) 실험 중단조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2015. 1. 9)	한미연합훈련 임시중지 → 핵실험 임시중지
	외무성 대변인 성명 (2016. 1. 15)[7]	한미연합훈련 중지 → 핵실험 중단
	리수용 외무상 AP 인터뷰 발언 (2016. 4. 23)	한미연합훈련 중지 → 핵실험 중지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 오슬로 1.5트랙 회의 (2017. 5. 8)	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② 대북제재 해제 → 핵·미사일 실험 중단 ③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계춘영 인도주재 북한대사 (2017. 6. 23)	(일시적 또는 영구적) 한미연합훈련 중단 → 핵·미사일 실험 중단
북·미 대화조건	조선신보 (2009. 10. 9)	미국의 핵정책 변경
	외무성 대변인 성명 (2016. 4. 12)	제재와 압박 중단, 대북 적대시정책 완전한 종식
비핵화 신뢰구축 조건	외무성 비망록 (2010. 4. 21)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건은 평화협정
	노동신문 (2009. 10. 14)	조미 평화협정 체결 후 조미 평화관계 전환 및 조선반도 비핵화 추진
	노동신문 (2010. 10. 14)	북미 평화협정 체결만이 조선반도 비핵화 방도
한반도 비핵화 조건	노동신문 (2009. 10. 14)	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② 평화협정 체결 ③ 전조선반도 및 세계의 비핵화
	외무성 성명	평화협정 체결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적극 추진

	(2010. 1. 11)	
	노동신문 (2016. 7. 6)	①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② 남한 내 모든 핵무기·기지 철폐와 검증 ③ 미국 핵 타격수단의 한반도 전개 중단 ④ 대북 핵위협 및 핵불사용 확약 ⑤ 미군철수 선포
한반도 평화 선결조건	노동신문 (2009. 1. 15)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 개선 조건	민화협 (2017. 6. 23)	①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②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③ 상호 비방·중상 무조건 중단 ④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우선 해소 ⑤ 남북대화에 북핵 문제 배제 ⑥ 대북제재 철회 ⑦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⑧ 중국식당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⑨ 민족대회합 개최

① 핵실험 중단 조건

o 북한은 핵실험 중단조건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o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전환(한미연합훈련 중단)하면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

o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대화'가 적절한 등가적 보상에 해당하느냐의 문제
  - '안보 대 대화'의 교환 등식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등한 입장의 대화"가 아닌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오히려 '훈련중단(안보) 대 실험중지(안보)'를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의

7)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2016. 1. 15).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음

o 불법적 핵실험과 합법적 군사훈련을 대비시키는 논리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측면에서 핵실험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무엇을 근거로 '불법'으로 간주할 것인지 대해서는 국제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한미연합훈련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음

② 북·미 대화의 조건

o 북한은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주장
  -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주요 거론 내용들은,
  ①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의 핵정책
  ② 제재와 압박의 주도
  ③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위협
  ④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
  ⑤ 체제 및 지도자 모독을 비롯한 언어적 비방

o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볼 때, 미국의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위의 내용 중 일부를 실행하면 대화의 의사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o 우선적 미국의 적대정책 전환의 행동이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대화는 '불평등한 대화'로 배격한다는 입장
  - "대화와 군사적 위협, 대화와 제재는 결코 량립될 수 없다"
  - 최근엔 북·미 대화에 특정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발언,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구하거나 전제조건을 다는 대화는 거부하지만, 대화의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는 '평등한 입장'의 대화로 가능하다는 입장[8)]

8) "[단독] 최선희 북 외무성 국장 인터뷰 "비핵화 회담은 안 해"," JTBC 8뉴스(2017. 10. 22).

□ **주요 발언을 종합한 북한의 북핵 로드맵 추정**

o 지금까지의 북한 발언들의 조각들을 모아 종합하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북핵 로드맵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음. 크게 3개의 묶음(단계)으로 볼 수 있음

o 1단계
- 한미연합훈련 중지,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조치(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대북 불가침 선언, 대북제재 해제, 언어적 비방 중지 등), 핵보유국 인정 등이 취해지면 여기에 맞춰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
- 지금까지 북한이 줄곧 주장해 왔던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이 1단계의 핵심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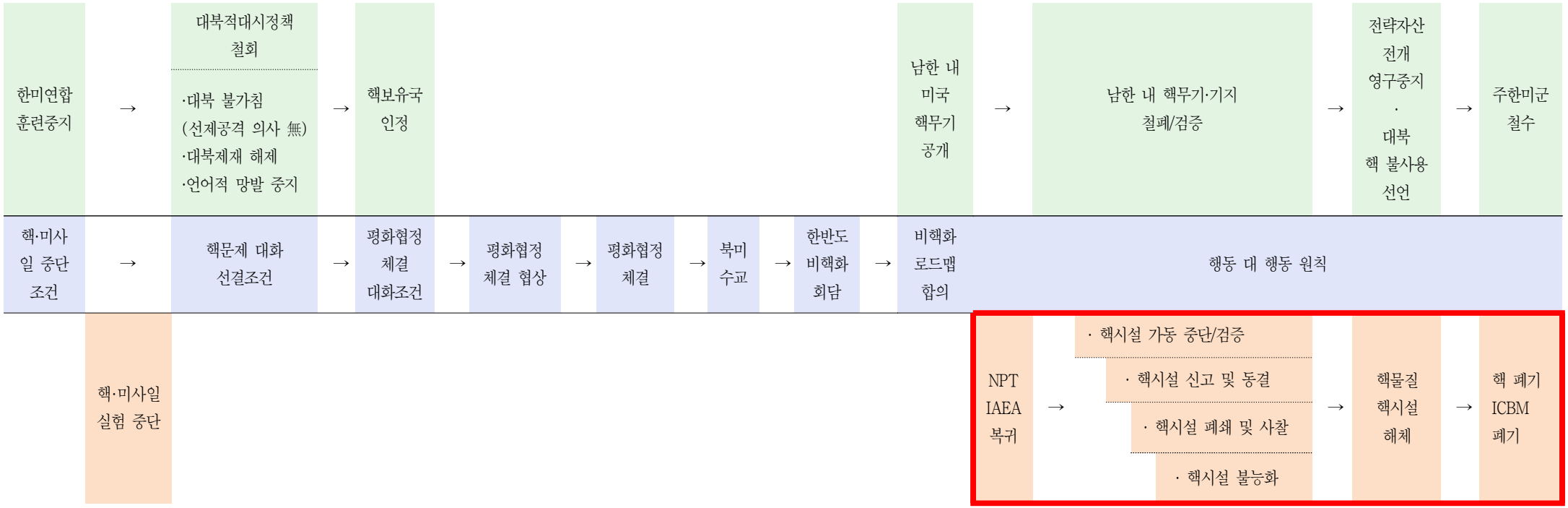
o 2단계
- 핵보유국 인정을 기반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북미수교를 맺는 일련의 평화체제의 제도적 수립을 목표
-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지만, 3자 또는 4자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없기 때문에 수용할 여지는 충분

o 3단계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여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비핵화 단계를 진행
-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장했던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핵무기·기지 철폐·검증,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영구 중지, 대북 핵 불사용 선언, 주한 미군 철수 등이 차례로 배치되는 구도
-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왔다는 점
- 따라서 만약 북한이 여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 과거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된 비핵화 과정을 준용할 수 있음

o 정작 북한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요구조건을 중심으로 언급

- 따라서 1단계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 2~3단계에서 평화협정이나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는 블랙박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음

북한의 주요 발언을 종합한 대외용 북핵 로드맵



※ 블랙박스(북측 비핵화 부분 미언급, 9.19 핵폐기 단계 준용)

□ **북한의 실제 전략적 목표**

o 위에서 추정해 본 북한의 북핵 로드맵을 기초로 실제 북한이 전략적으로 의도하는 목표 차원에서 로드맵을 상상해 볼 필요
- 첫째, 북한이 핵·미사일의 개발·보유로 얻는 편익과 체제 내적 필요성
- 둘째,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상태일 때 놓일 수 있는 상황과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추론

o 체제안보, 정권안보, 수령안보(리더십안보) 등과 핵무기는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대체할 것은 없음
- 보유와 포기시에 갖는 '이익'과 '손실'이라는 대차대조표로 환원하기 불가능한 영역
- 핵보유는 대외관계 측면에서 리스크가 매우 높은 극단치를 상정한 전략, 폐쇄적인 '체제생존형'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기반
- 이미 상당한 내적 고립과 빈곤을 경험한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며 줄 수 있는 대체 '이익'이란 사실상 없음

□ **북한은 안전보장시 과연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가?**

o 핵무장 동기
- 핵억지 → 안전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
- 관심전환적 핵무장(diversionary proliferation): 주민 결속용
- 정권 유지전략 → 정권 무력화 선택 가능성 낮음.

o 핵무장 효용성 체감
- 주민 결속용 핵무장은 대북제재 지속성과 강도에 따라 상쇄 가능성
- 개발 단계에서의 북한 시간 주도권, 개발 완성 후에는 점차 상실

□ **북한이 핵무기 부재 상태일 때의 처할 상황과 우려하는 상황**

① 정세와 로드맵 주도권 상실 우려

-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북핵 대화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전반의 상황을 좌우하는 주도권 어느 정도 발휘
- 그러나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은 북한이 가진 것(안보수단)을 하나씩 포기해 가는 과정으로 주도권을 상실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② 비핵 상태의 안보 불안 대체재의 부재

- 협상 및 비핵화 실행과정은 미국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진의와 이중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비핵 상태의 안보 불안에 새롭게 적응해야만 하는 과정
- 핵 포기 시 '안보 대체재'에 대한 불안으로 통치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려 체제 불안정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③ 군부의 반발과 통치 불안정

- 통치 불안정성의 진원지는 군부가 될 수 있음
- 핵 포기를 과연 군부가 순순히 수용하고 자신의 기득권 상실을 인정하며 김정은을 지속적으로 지지할지는 미지수

④ 주민 결속 상징재의 부재

- 핵·미사일을 주민 결속의 기제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핵 포기 이를 대체할 강력한 결속기제 필요, 현재로선 대체재가 부재

⑤ 핵 포기 후 이익이나 성과의 부재시 리더십 균열

- 이익이나 성과가 대내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가 닿지 않을 경우, 리더십에 균열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듦

⑥ 대외적 '핵정치' 카드 상실과 전략적 존재감 상실

- 동북아 전략 경쟁과 군비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핵정치를 대체할 존재감 있는 북한의 대외전략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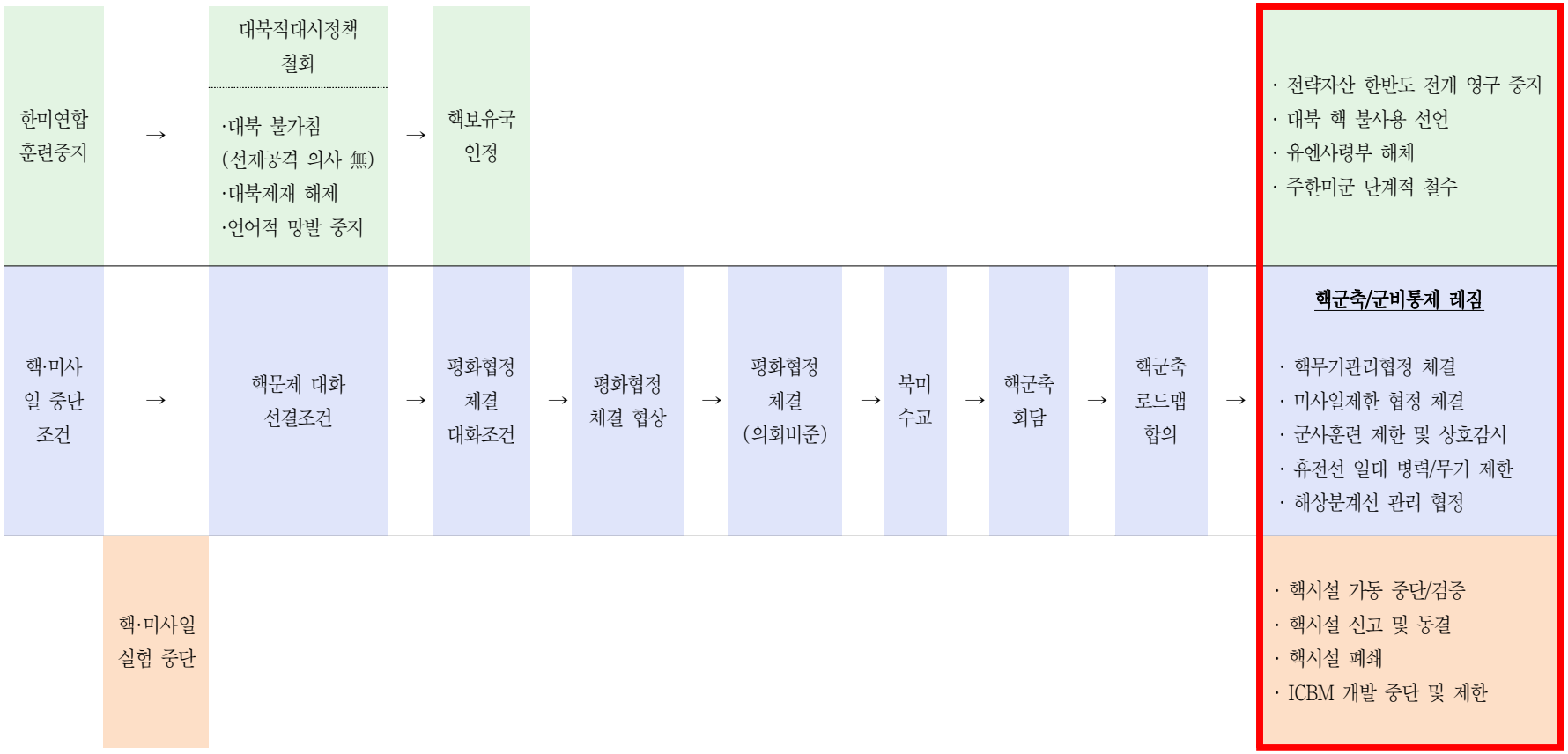
□ **북한의 이상적인 북핵 로드맵**

o 북한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북핵 로드맵의 추론
- ‘핵보유 상태에서의 북·미 평화공존’
- 북한체제나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획기적인 ‘질적’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현 체제와 정권 아래에서 핵은 포기할 가능성 낮음
- 핵무기를 대체할 ‘정권안보’ 대체재를 찾기 어려움
- ‘핵보유 상태에서의 북·미 평화공존’이란 전략적 목표에 입각해 단계별로 구상하는 북한의 로드맵은 아래 그림과 같음

o '핵보유 상태에서의 북·미 평화공존' → ‘평화협정-핵군축’ 프레임

① 미국과의 동등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
- 핵 능력 및 지위 측면에서 최대한 미국과 동등한 능력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총력, 대등한 위상에서 협상에 임하는데 일차적인 목표
- 동등한 능력과 지위는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규모의 동등함이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을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태
- 대등한 위상은 핵보유국이라는 동질성에 기반 한 위상을 의미
- 핵 능력이 의심받고 위협이 저평가 받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핵폐기 종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완성·보유를 인정할 때까지 ‘올인’

북한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북핵 로드맵(핵보유 상태에서의 북·미 평화공존: '평화협정-핵군축')



② ‘선 비핵화 조치’에서 ‘선 대북적대시정책 전환’으로의 프레임 전환

- 미국이 선 행동(조치)을 통해 신뢰성을 보이는 것에 따라 후속적으로 북한이 여기에 반대급부를 주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프레임
- ‘9.19체제’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에 기반 해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나리오로 능력과 지위에서 열세에 있던 북한이 수용
- ‘9.19체제’의 로드맵 전반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평가하고 보상을 주는 위치에 있는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함.
- 북한은 ‘9.19’ 로드맵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든 파행이 일어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통제 능력에 큰 한계를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북한이 얻었을 교훈은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이 먼저 신뢰를 조성하는 선 조치를 할 때,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신뢰를 단계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로드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③ 핵보유국 인정 후 평화협정 체결 전략

-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핵·미사일 실험을 늘린 것은 ‘인정’을 종용하고 강제하는 투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④ 조약(treaty) 수준의 평화협정 통한 지속성 보장

-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북·미 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술적으로 3자 또는 4자도 용인하는 체결 전략으로 나갈 수 있음
-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협정의 다자구도 여부보다는 평화협정이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수준의 ‘협정(agreement)’보다는 의회비준을 받는 ‘조약(treaty)’ 수준의 신뢰성을 갖느냐의 여부
- 정부가 바뀔 때 쉽게 파기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아닌 보다 지속성을 갖는 규범을 원할 가능성이 높음

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레짐' 하 핵보유 상태

-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이후, 비핵화회담이 아닌 핵군축회담을 통한 군축 차원의 핵문제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비핵화'와 '핵군축'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폐기만을 요구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북한이 수용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핵군축'은 상호 보유한 핵무기의 위협을 인식하고 객관화하여 '관리 및 제한 협정'을 통해 관리하면서 양적·질적으로 위협을 줄여가는 게 핵심이란 점에서 북한이 핵군축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
- 북한의 설득 논리는 당장의 비핵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핵군축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은 후, 이에 기초하여 미래에 핵 폐기를 별도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
- 신뢰 조성을 위해 상대에 대한 핵위협을 줄이는 조치를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요구할 가능성
- 핵무기관리협정이나 미사일제한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핵군축과 병행해 재래식 군비통제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o 결론적으로 북한은 '복구 가능한 핵능력'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고 기존의 핵은 보유하는 상태 정도를 이상적 최종상태로 생각할 수 있음

- 완전한 핵능력 상실이 아닌 기존 핵은 불문에 부치고 '복구 가능한 핵능력' 수준에서 현재의 핵 활동을 동결하는 것을 최상의 상태

o 미사일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의 고도화를 중단하고 기존 ICBM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봉합을 원할 가능성이 있음

- ICBM 고도화 중단 및 제한에 상응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줄이는 것을 미국에게 요구

o IAEA나 NPT와 같은 기구/체제보다는 남·북·미·중 정도의 다자가 맺는 '한반도 핵무기관리협정'이나 '미사일제한협정' 등을 통해 지역 핵군축 레짐을 원할 가

능성이 있음

- 이런 핵군축/군비통제 레짐을 통해 느슨한 상호 감시·검증 시스템을 유지하길 원할 것으로 보임